

제13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갈등의 남북관계 - 해법은 무엇인가

일시 : 2009년 3월 18일(수) 14:00-17:00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주
최



Korea Peace Institute

한반도 평화연구원

www.koreapeace.or.kr

포럼일정

등록		13:30-14:00
개회식		
인사말씀		14:00-14:05
운영관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사회 운영관 원장		
발표	발표1 What to do with North Korea?	14:05-15:30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	14:05-14:30
	발표2 위기의 남북관계: 진단과 해법	
	김근식 경남대 교수	14:30-14:55
회의	발표3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4:55-15:20
휴식		
		15:20-15:40
논평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15:40-16:00
	조건식 전 통일부 차관, 현대아산 사장	16:00-16:15
발표자 응답 및 자유토론		
		16:15-17:00

목 차

- 포럼일정2
- 목 차3
- 발제문
 - What to do with North Korea?(안드레이 란코프)5
 - 위기의 남북관계: 진단과 해법(김근식)17
 -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윤덕민)33
- 부 록
 - 연구원 소개43
 - 연구원 조직44
 - 참여방법46
 -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47

발 표

What to do with North Korea?

Some humble suggestions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번역은 KPI사무국에서 진행 되었으며, 인용하실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 has to admit: President Lee has been unlucky so far. Elected amidst great expectations, he was bound to cause disappointment even had things gone extremely well. Unfortunately, things did not go well, especially at the economic front – but North Korea also makes a lot of trouble these days. The intra-Korean relations have not been so bad in more than a decade: North Korean media erupts with verbal abuse of Seoul, the exchanges were dramatically scaled down by Pyongyang, and a military provocation seems to be a likely possibility.

I. Current problems

The first question we must answer is simple "what have gone wrong, and to which extent the current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risis in the North-South relations?"

When President Lee took office, he faced two options in dealing with the North. He could continue business as usual, quietly accepting President Roh's policy of unilateral concessions and unconditional aid, pumping even more money to Pyongyang coffers. Alternatively, he might choose to test another approach, insisting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운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선출된 그는 국정이 매우 잘 운영 되었어도 실망을 안겼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들 아-특히 경제 분야에서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근래에 북한 역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근 10년 넘는 기간에 남북 관계는 이렇게 악화된 적이 없었다. 북한 언론은 남한에 대한 언어적 공격(격한 비난)으로 범람하고 있으며, 남북 간 교류는 평양에 의해 그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까지 보이는 듯하다.

I. 현재의 문제들

우리가 대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남북 관계 위기에 현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가?

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와 조건 없는 지원을 조용히 수용하여 평양의 금고에 더 많은 돈을 퍼주면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혹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북한 측으로부터 일정한 조건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째를 선택했고 북한은 이 때문에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단단히 버르고 있다.

비록 남한 당국자들 중 몇몇이 선부르거나 불필요한 발언들로 현재의 위기를 악화하는데 기여하긴 했으나 현재의 위기는 실은 북한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평양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여는 그들의 조건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조건을 달리는 남측의 시도는 남득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어찌면 그들은 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차기 남한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교훈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대립에서 오는 위험을 더욱 더 감수하게 한다. 한다. 그들은 새로운 오바마 정권이 온건파들로 지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필자의 최근 워싱턴 방문은 이러한 예상들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했지만 이는 평양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II. 서울의 환상

on a measure of conditionality from the North Korean side. President Lee made a second choice, and the North is determined to punish him for this.

Indeed, the current confrontation was initiated by the North Korean rulers, even though some awkward or unnecessary statements made by Seoul officials did contribute to the current crisis. The message of Pyongyang is clear: they want to show that engagement will be possible on their conditions only, that other side's attempts to infuse conditionality in the relations are not acceptable. Perhaps, they are not so much targeting President Lee, but send their warning to the next South Korean leaders instead: this should be a lesson to remember.

The North Korean rulers believe that for a while they will enjoy a more amiable US policy, and this makes them more willing to risk a confrontation with the South. They hope that new Obama administration will be dominated by the soft-liners. Although my recent trip to Washington made me somewhat skeptical about these assumptions, they seem to be widely believed in Pyongyang.

II. Seoul's illusions

However, some responsibility for the current confrontation rests with the South Korean side as well. First of all, the last year has been marked by unnecessary tough talk of the Seoul officials. Such verbal attacks will not help: if anything, North Korea far exceeds the South when it comes to chest-beating contest. The polite silence is by far the best way to deal with Pyongyang's hysterics.

Unfortunately, the well-rehearsed hysterics of the Pyongyang leaders cannot be simply neglected. If ignored, the North Koreans will keep raising the level of the tensions, and sooner or later their threats and provocations will start having an impact on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its international standing - investors like stable countries.

Unfortunately, there seem to be problems with the basic strategic approach. When President Lee took power, his buzzwords for the North Korean policy were "conditionality" and "reciprocity". Conditionality might be a good idea indeed, but conditions should be moderate in order to be accepted. Reciprocity seems to be an illusion. The North-South ratio of per capita income is estimated to be at least 1:17 (and perhaps as high as 1:50). It is virtually

그러나 현재 갈등에 대해서 남한 측 역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우선 작년은 남한 당국자들의 불필요한 강한 발언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한 언어적 공격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속임수 대회를 한다면 북한은 남한을 훨씬 능가한다. 현재까지는 은근한 침묵이 평양의 히스테리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잘 훈련된 평양 지도자들의 히스테리들을 단순히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무시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조만간 그들의 위협과 자극은 남한의 경제상황과 국제위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안정된 국가를 선호한다.

불행하게도 기본적인 전략적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대북 정책에 관해 그가 사용한 통용어는 "조건부"와 "상호주의" 이었다. 조건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일수도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적당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착각인 듯하다. 남북의 일인당 소득 비율은 최소한 1:17 정도로 추정되고(어쩌면 비율은 1:50 만큼 높을 수도 있다)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두 나라 간에 약간의 상호주의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록 언론에서는 상호작용을 "협력" 혹은 "교환" 이라고 설명할지라도, 좋든 혹은 싫든 간에 남한은 주는 입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조건부"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비핵개방3000' 이라는 계획을 내세웠고 그것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핵개방3000' 은 서울은 북한에게 관대한 일괄 지원을 제공해줄 의향이 있으며 그것이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3천불 수준으로 증가 할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화 500-1,500달러 사이이다). 한 가지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방식의 개혁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성공할 가망이 없다. 북한은 지원 세례 받는 것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비전 3000'에 첨부된 조건들은 평양에게 전혀 수용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 친척들과 그들의 소수 추종자들에게는 (현시점에서는 그들의 의견만이 정말 중요하다)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관대한 제안일지라도 당장의 정치적 안정을 불확실하게 한다면, 김 위원장 친족들과 추종자들은 그 지원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비전 3000' 또는 "개방", "개혁" 혹은 기타 대규모의 내부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계획들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impossible to expect any kind of reciprocity between countries whose economic levels are so vastly different. Like it or not, South Korea will remain on the giving end, even though the media will probably describe the interactions as "cooperation" or "exchange".

To implement the idea of "conditionality", the government came out with the '3000 vision' plan which is still presented as the basis of President Lee's 'Nordpolitik'. The "3000 vision" implies that Seoul is willing to provide the North with a generous aid package which will increase its per capita GDP to \$3000 (the current level, depending on whom you believe, is between \$500 and \$1500). As a condition, the North should surrender nuclear weapons and introduce Chinese-style reforms.

Needless to say, it is a non-start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not mind to be showered with aid, but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3000 vision' are utterly unacceptable to Pyongyang. For the Kims family and a handful of their henchmen - the only people whose views really matter on this stage - political stability is far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growth, and they will never accept even the most generous

offers if conditions attached might put immediate political stability in doubt.

Therefore, North Koreans will never accept '3000 vision' or any other plan which is conditioned upon "openness" "reform" or any other large-scale internal transformation.

III. Way ahead

However, interactions with the North seem to have no alternative. In the short run, this will help to increas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this is the only way to support the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t seems that even optimists have finally realized that North Korean leaders have not the slightest intention to emulate China. Therefore, North Korea can be transformed from "within and below", that is, by stimulating the pro-reformist forc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itself. In order to reach this goal we need to increase contac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outside world.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as well as economic cooperation exposes North Koreans to South Koreans and their vastly better way of life, and in the long run will make them long for a change in their

Ⅲ. 앞에 놓인 길

그러나 북한과의 상호작용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듯하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한반도 안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장기에는 북한의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낙관론자들도 드디어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을 모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에서 그리고 밑에서" 즉, 북한 사회 자체 내 개혁지지 세력들을 자극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외부세계 간 접촉을 증가 시켜야 한다. 문화적·교육적 교류 외에 경제적 협력은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과 남한 사람들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노출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사람들이 그들 사회에서도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 것이다.

한 가지만 예로서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남북 공동 관리되는 개성 공단을 보자. 그것은 종종 "유화정책 실행" 혹은 심지어 "노예 노

동 캠프"로 종종 묘사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심각하게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들이다. 개성의 일자리들은 한국의 수준으로는 매우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가장 보수를 많이 주는 정규직이며 이러한 사실은 중국 국경 부근의 외진 지역까지 알려져 있다. 비록 개성 산업 공단이 김정일 친족 정권에 돈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많은 수의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친척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 개성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 소유, 개인 물건, 그리고 대화들을 관찰함으로써 공식적 선전이 그들이 짐작했던 것 보다 덜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발견은 체제를 강화 시키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외부 세계(그 중에서도 특히 남한)와 접촉의 노출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사회 변화를 위한 압력을 더욱 빠르게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협력관계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괜찮다면, 새로운 버전의 '햇볕정책' 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햇볕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전 정권들의 정책들과 달라야 한다: 평양 내 중앙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돈이 적을수록 더 좋다. 평양의 금고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돈은 사회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기간 에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먼

society as well.

Let's take just one example, that of the jointly North-South managed Kaesong Industrial Park, which has been criticized so much. It is often described as an "exercise in the appeasement", or even as a "slave labor camp". These descriptions, however, are seriously misleading. The jobs at Kaesong, meagerly paid by South Korean standards, are by far the best-paying regular jobs in the North, and this fact has become known even in the remote townships near the Chinese border. Although Kaesong Industrial Park does provide the Kim family regime with money, but it also brings an unprecedented number of North Koreans into direct contact with their cousins from the South. As North Korean workers at Kaesong observe the Southerners' dress, possessions, personal items, and conversations, they realize that official propaganda is even less honest than they have suspected. Needless to say, such a discovery will not reinforce the regime - on the contrary, the exposure to the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above all, with South Korea) will help to change the mindset of the North Korean populace, speeding up the pressure for social change.

Therefore, the revival of cooperation is

necessary. If you like, the new version of the 'sunshine policy' is most welcome. However, this new 'sunshine policy' should be different from policies of earlier administrations in one important regard: the less money is given straight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Pyongyang, the better. Money which are delivered straight to the Pyongyang coffers will not be of much help, they will be used to enforce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society. This might increase stability in the short term, but it will also create more problems in a distant future. Hence, emphasis should be on projects which deliver aid to the grassroots level, and also provide the North Koreans with useful knowledge of the modern world. If projects require cooperation and joint work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workers and experts, it will be even better.

At the same time, these efforts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upport to pro-democracy movement in North Korea. The defectors' community is likely to play a vital role in this case. There are some 15,000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today, with approximately 2,800 people arriving in the last year alone. The majority of these defectors stay in touch

미래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지원을 전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이 남북 근로자간 협력과 협작을 요구한다면 더더욱 좋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 내 민주화운동 지원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탈북자 공동체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남한에 약 15,0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대략 2,800명이 도착하였다. 대부분 이런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며 밀수출입 조직을 이용하여 편지와 돈을 송부하며 국경 부근에 사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하여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런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남한에서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탈북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영어를 공부하고, 주요 남한 기업들에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김정일 정권이 끝날 때, 평양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엘리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한 교육을 받고 문화 적응을 하였지만 북한 출신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필수적이고, 많을수록 좋다.

with their families in the North using smuggling networks to send money and letters and using Chinese mobile phones to call relatives near the border. Therefore, these defectors have a growing influence on North Korean society. By and large, they are not doing well in the South. There should be more of an effort to help these defectors get a college education, study English, and gain jobs with major South Korean companies. When the Kim regime ends, it will be essential to have a relatively large number group of educated Koreans with Southern education and acculturation but with Northern Korean roots and connections to build help establish a new, liberated elite in Pyongyang.

IV. 몇 가지 제안들

만약 햇볕정책의 복원이, 비록 수정된 형태 일지라도 우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는가?

- 과민 반응하지 말자. 속임수와 위협적 행동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북한 사람들에게 강경 발언들은 먹혀 들지 않는다. 평양의 비난에 대해 차분한 냉담만이 유일하게 현명한 전략이다. 만

IV. Few suggestions

If the revival of the sunshine policy, albeit in revised form, is our goal, how can we reach there? In other words, what should be done now?

- Do not overreact. Tough statements do not work with the North Koreans who are second to none when it comes to chest-beating and sable-rattling. Calm indifference to Pyongyang's abuse is

the only wise strategy. If Pyongyang leaders move to the military provocation, the same rule should be applied as well: the invading ships or troops should be repelled, but the damage should be kept at the minimum.

- Quietly admit mistakes. Among other things, gradually get rid of the '3000 vision' plan which is not going to be accepted anyway. Come out with more realistic proposals.
- Do not entertain false hopes: North will not de-nuclearize and will not initiate Chinese-style reforms, since Pyongyang leaders see these measures as the surest way to their demise, East German style. Like it or not, for some time the North will remain what it is: a destitute and brutal dictatorship whose leaders are oblivious to the sufferings of the commoners. Nonetheless, it has to be dealt with.
- The resumption of the full-scale interaction with the North is highly desirable, and constitutes the only way to deal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the revival of the 'Sunshine policy' – albeit with some important moderations – is the only way to go. In

약 평양 지도자들이 군사적 도발로 수위를 높이더라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침입하는 함대와 군대는 격퇴되어야 하지만, 피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조용하게 실수를 인정하라. 다른 것 중에서도 어차피 수용되지 않을 '비핵개방 3000' 계획을 철회하라. 더 현실적인 제안들을 들고 나와야 한다.
- 거짓된 희망들을 안지 말자: 북한은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방식의 개혁들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동독의 경우처럼 그들의 확실한 소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좋은 싫든 간에 당분간 북한은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즉, 일반 대중들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지도자들이 있는 가난하고 가혹한 독재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과의 전면적인 상호작용 회복은 매우 바람직하며 북한과 협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중요한 수정이 가해지겠지만 '햇볕 정책'의 복원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다. 단기적으로 그러한 접근법은 긴장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교류는 북한 내부에 외부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정보의 확산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다.

- 이러한 교환의 '상호주의' 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라. 남북 간 상호작용은 언론에서 '협력'으로 묘사될 수 없지만 (묘사될 수 있겠지만 이 원래 교수께서 의도하신 뜻인 것 같음) 이것은 오해다. 두 국가 간의 거대한 경제적 격차 탓에 북한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 상호작용이 다시 재개 된다면, 혹은 재개될 때, 전제조건들을 주장하되 그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내면적으로 수용하라. 거창한 계획 대신 남한 직원들의 현지 실행 사업에 관여 혹은 사업의 감시 같은 사소한 양보들을 요구하라. 결론적으로 경제 교류는 남북 사람들간 상호작용과 지역적 실체들의 힘을 증가시켜야 한다.

the short run, such approach will help to reduce tensions, and in the long run the exchanges will bring inside North Korea more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Spread of this information is likely to undermine the regime, even though it will take long time.

- Do not have excessive expectations about 'reciprocity' of these exchanges. The North-South interaction cannot be described as 'cooperation' in media, but this is misleading. Because of the gross economic inequality of partners, the North has almost nothing to offer.
- When/if interaction restarts, insist on conditionality, while quietly accepting that conditionality has its limits. Instead of grand schemes, demand minor concessions, like monitoring or involvement of the South Korean personnel in implementing projects on the ground. The bottom line: the economic exchanges should increase interpersonal interaction betwee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and power of local entities.

발 표

위기의 남북관계: 진단과 해법

김근식 교수(경남대학교, 정치학)

I. 파탄지경의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이명박 정부 임기 1년 만에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당국 간 회담은 중단된 지 오래고 이산가족 상봉도 끊긴 지 오래다. 남북의 대결 속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도 이미 중단되었고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사실상의 폐쇄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북한은 서해 NLL을 비롯해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하늘의 민항기 운항까지 위협하며 대남 압박을 전 방위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군통신선 차단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입출경이 위협받으면서 이제는 당국 차원의 대결과 압박을 넘어 민간의 경험사업까지 누란지위에 처해 있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예다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강행 방침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최대치의 긴장고조를 맞고 있다.

정치군사 합의무효를 선언한 조평통 성명 이후 남과 북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이 되었다. 북한은 더 이상 남측에게 과거와 같은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상호 체제 존중과 군사적 대결 해소 노력 등은 분명 2007년 10.4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따라서 이들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셈이 된다. 조평통 성명에 과거와 달리 10.4 선언 이행 촉구가 빠져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날 노동신문 논평에 실린 '남북관계를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사태'라는 상황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관계개선의 가능성과 조건마저 아예 차단하고 남측의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보다는 북한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북한이 태도를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남북관계 중단 불사론의 연장선이다. 지난 연말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겠다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질타했던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다. 관계 단절이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키고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주관적 기대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3.1절 경축사 발언은 북한의 반응을 얻어내기 힘든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곧 이은 외교부 차관의 북한인권 강성 발언은 대화를 원한다는 남측 당국자의 발언을 원점으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인권 거론으로 인해 곧바로 상호 체제존중을 명시한 10.4 선언 위반으로 비판받았다. 국민원로회의에서 제기된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칙과 기다림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남과 북은 치킨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겁쟁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북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기 스스로 치킨게임을 멈출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이 굴복해야만 이 게임은 끝나게 되어 있다. 남과 북은 강 대 강, 말 대 말의 정면 대결 기세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II. 북한 책임론의 허와 실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다. 지난 1년여의 남북관계 진행과정은 다 잊은 채 최근 북한이 내놓은 강경 대응조치를 이유로 대화를 원치 않는 곳은 북한이라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북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최근 조치는 도를 넘는 과도한 대응임이 분명하다. 애꿎은 민항기까지 위협하고 개성공단 출입마져 힘들게 하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에게 돌리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결백하고 억울한 것일까? 지금의 극렬한 남북대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긴 것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 이명박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명확한 메시지와 일관된 시그널을 북에 주지 못했다. 10.4 선언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합의된 북경 올림픽 공동응원단 모집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경제적 부담이 10.4 선언 이행의 문제점으로 매번 주장되지만 큰 비용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합의마저도 이명박 정부는 할 생각도 용의도 없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형식적 원칙론은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집단행동 운운하며 반대하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8.15 경축사는 곧 이은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분열 시도를 경계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묻히고 말았다.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합의의 이행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정부는 ARF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한 북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라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것과 자유 민주주의하 통일 원칙을 밝힌 게 전부였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겉으로는 대화 용의를 밝히지만 실제 속으로는 반복 대결과 대북 고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잘못을 고쳐놓기 전엔 남북관계 바닥도 감수하겠다는 정서적 고집에 더욱 충실했던 셈이다. 결국 남북관계 중단을 실행에 옮긴 것은 북한이

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교류협력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북한의 강경 대응이 잇따르자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북에 전가하는 것은 결코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

실사 북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내 탓 네 탓 책임공방만 하는 것은 또한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중단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북측의 책임이 크다는 비난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한 때다.

III.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ABR에서 불개입(disengagement)까지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노선에 입각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다. 전임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탓에 기존의 노선과 기조를 부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과거의 합의사항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 역시 정권교체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결과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존 합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곧바로 북한의 반발을 초래했고 정권 초기 남과 북은 신뢰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말 대 말'의 대결을 지속했다.

ABR을 바탕으로 갈면서 이명박 정부는 야당 시절 익숙하게 주장했던 선명한 대북 입장 즉 북핵 해결 우선과 상호주의 강화 및 북한인권 개선 등을 정책기조로 분명하게 내세웠다.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의 지속이 힘들고 명백한 상호주의 관철 없이는 대북 식량지원을 할 수 없었다.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감수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구체적 해법 없이 구호성 슬로건만을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비핵개방3000'이었다. 강력한 구호성 대북 정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북한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말 대 말의 대결을 넘어 행동 대 행동의 정면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10.4 선언 이행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 전면중단을 경고한 북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의연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응수했고 결국 북한은 지난 해 12.1 조치를 통해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인원 축소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남북의 대결이 확대되면서 결국 남북관계 전면 중단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었다. 이후 북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대결태세 선언과 조평통의 정치군사 합의

무효 선언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북한의 대남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입장도 갈수록 강경하고 완고해졌다. 남북관계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다는 고집이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 되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희망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북이 변화하기 전에는 결코 남북관계를 지속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고 관계를 중단해서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연한 버티기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남북관계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굳혀지고 있는 셈이다. 포용정책 대신 남북관계 중단 불사의 불개입 정책(disengagement)을 선택한 것이다.

IV. 인식의 '동굴'에 빠진 대북 정책

그러나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불개입 정책이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 변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다. 북을 변화시킬 아무런 효과적 수단과 지렛대를 갖지 못한 채 그저 퍼주지 않고 끌려가지 않겠다는 고집만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문만 닫는 형국이다.

이처럼 실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의연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다림의 정책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신념과 이를 정당화하는 비현실적 대북인식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중단하면 아쉬운 쪽은 북한이고 결국 북이 무릎 꿇고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주던 쌀을 끊고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북이 당장 그 손실 때문에 흔들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주관적 희망사항일 뿐이다. 내핍과 고립에 익숙해 온 북한에게 일시적 경제손실은 그들이 내세운 정치적 명분과 요구를 위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면 언젠가 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마땅히 하는 일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데 하늘이 도와서 북한을 변화시킬 리 만무하다. 남북관계의 문을 닫아도 북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무작정의 기다림은 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10년 동안 공들인 남북관계만 물거품으로 만들 뿐이다.

기다리면 북이 아쉬워 굴복할 것이라는 자의적 대북인식은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을 배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북미관계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단호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협상과 외교 중시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교착되고 북미관계는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르면 항상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미는 타협할 수 없다.¹⁾

결국 북한은 남쪽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북이 머리를 숙이고 나오게 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번 빠진 잘못된 인식이 냉정하고 엄연한 현실마저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플라톤은 인식의 동굴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바깥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대북 인식의 '동굴'에 갇혀 있는 한, 하염없는 기다림의 전략은 지속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그만큼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V. 북미관계 전망과 이명박 정부의 선택

이미 남북관계 자체의 힘으로는 지금의 악화국면을 해소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뱉어 놓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일관되게 상대방의 굴복을 전제로 한 요구여서 어느 한쪽이 고개를 숙이기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면 남북의 치킨게임을 멈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제3의 외부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 바깥의 북미관계라는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 일정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식인 바, 그것은 남과 북이 지금 미국을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은 남한과의 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와 의 통 큰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다소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결국은 한국을 고립시키고 굴복시키겠다는 통미봉남의 유혹은 북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남북관계 자체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대를 걸고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방한한 힐러리 국무장관의 통미봉남 반대 입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외부 요인을 통한 남북관계 돌파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람직하기로 는 북미관계가 협상을 통해 진전되면서 그 여파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남북관계가 자연스럽게

1) 지난 해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검증문제와 중유제공을 연계시킨 강경 입장을 내세워 그 예측을 현실로 바꾸려는 직접적인 노력까지 기울였다. 금년 초 워싱턴을 방문한 대통령 외교자문단 일행이 오바마 측 인사를 만나 대북특사 파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상화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미 3자가 당장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북한은 미사일 카드를 버리고 미국과의 첫 협상이 원만히 시작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적지 않은 양보를 얻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금창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결국은 다음 해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받고 의혹시설 방문을 허락함으로써 금창리 문제를 해결한 후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합의했다. 2006년 7월엔 북미간 최대 쟁점이었던 BDA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다가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미사일 발사로 얻은 이익의 경험이 이번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선부른 유혹을 부채질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막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눈길 끌기 정도에 머물지 않고, 만의 하나 과거 미사일 발사로 얻은 몇 번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발사까지 강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북에게 치명적이다. 북미 협상의 기대는 사라지고 명맥을 유지하던 6자회담마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선의를 가지고 북을 대하려던 협상과들도 대북 경계심과 강경론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된다. 남북관계가 악화에 더해 북미관계까지 경색되는 것은 북이 미사일을 통해 얻으려는 미국과의 통 큰 협상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든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신속한 양자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핵해결의 실질적 단초가 되었던 2.13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07년 2.13 합의는 당시 핵실험과 대북 유엔제재로까지 대립했던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주고 받기식 쟁점 타결에 나선 점이 당시 합의 도출의 주요 배경이었다.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되었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상호 타협을 얻어낼 수 있었다. 신뢰에 기반을 둔 진지한 양자협상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정부 역시 양자협상의 의지를 적극 보여야 한다. 말을 앞세울 게 아니라 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협상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힐러리 장관도 보즈워스 대북특사도 6자회담보다는 양자협상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북미관계 전개과정에 임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경로를 좇아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걸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협상 중인 미국 정부에 대해 한미공조를 내세워 대북 강경 입장을 주문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미 합의 사항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외교적 결례마저 강행했던 김영삼 정부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돕기는커녕 또 다시 한미공조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북미 양자협상에 뜬금없이 남북관계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2009년 한반도 정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오히려 2009년 북미관계에 대비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도록 미국에 적극 요구함으로써 선제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이 결국 북핵 문제의 진전을 가져오고 그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말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대북 핵협상 말고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북미관계 개선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을 지지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오히려 차후에 있을 남북관계 복원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용어상 민감한 반감을 가졌던 북한이 그 해 말 남측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북미 양자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협력함을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장기경색중인 남북관계 복원을 도모한다면 2009년 진행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협상에 대해 YS식의 시대역행적인 훼방꾼이 아니라 DJ식의 시대순응적인 촉진자 역할로서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 정상화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과의 첫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적극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북한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대미 요구와 경직된 입장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것이라는 오관에 매몰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채널을 통해 충분히 북을 설득하고 설명해줘야 한다. 지금의 미사일 사태와 같은 북미 갈등을 해소하고 북미 관계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영향력 확보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독자적 지렛대가 확보되어야만 북미관계의 진전과 갈등 상황을 한반도 평화라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유지는 북미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을 때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한편 북미간 점점 찾기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유지는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개입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남과 북, 북한과 미국 모두 기싸움이나 강경발언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VI. 포용정책 비판에 대한 반비판

지난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른바 포용(개입:engagement) 정책이었다.²⁾ 교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사실 그 연원이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는 정치적 판단에 토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중단을 불사해서라도 퍼주기과 끌러나기기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서 있고 오히려 남북관계 중단이 북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변화를 도모하는 개입의 '방식'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그 방식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면 되지만 개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개입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개입정책이 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했다면 보다 효율적 방법으로 개입을 하면 되지만, 개입정책이 애초부터 북한변화를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개입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개입의 방식을 '개선'하기보다는 개입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이른바 고립화(isolation), 불개입 정책(disengagement)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른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시도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인 바, 그 전제는 전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거나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시도는 잘못된 평가에 기초한 그릇된 방향이 된다. 포용정책 비판의 경우에도 포용정책 자체에 대한 근원적 원죄를 강조하는 입장과 포용정책의 추진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시행착오를 지적하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을 터, 만약 정책의 큰 방향은 옳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식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면 포용의 기초를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

2) 일반적으로 개입정책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접촉 확대와 구축을 통해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the attempt to influence the political behavior of a target state through the comprehensiv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contacts with that state across multiple issue-areas)으로 정의된다.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Spring, 2001), p. 559.

적인 방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 반면 포용정책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면 포용기조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정책 노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우리 사회의 대북포용정책 비판은 포용정책 자체의 근원적 결함이 아니라 분단체제라는 한반도적 현실에서 비롯된 특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포용을 통해 과연 북한이 변화했는가라는 질문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호주의가 제대로 관철되었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포용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그것들이다. 만약 이들 비판이 타당하고 그 잘못이 바로 포용정책의 근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옹당 포용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이 적실하지 않고 거론된 문제점이 포용정책의 원천적 속성이 아니라 한반도적 현실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포용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포용정책이 북한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적 개입정책 즉 대북포용정책이 분단국가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즉 분단체제에서 일방이 타방을 대상으로 개입정책을 펼 경우 상대방은 통일이라는 구심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훨씬 더 변화를 주저하고 변화로 인한 체제통일을 위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와 통일의 가능성이 상대국가로 하여금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현실적 딜레마를 내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포용정책이 분단국 사이의 개입정책이고 따라서 항상 일방이 타방으로 합쳐지는 통일이라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개입정책에 비해 대상국가인 북한이 훨씬 예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실제로 지금까지의 대북포용정책이 비판론자들의 기대하는 만큼의 북한변화를 쉽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포용 기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분단국가 사이의 포용이라는 역사적 구조적 특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용정책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충분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한반도의 현실과 남북의 이질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게 된다. 한국의 포용정책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쌀과 비료를 주면 반드시 북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함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 주민 차원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상호주의를 고집하기는 힘들다. 통일을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구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듯이 경직된 기계적 상호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게 현실이다.

또한 상호주의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데는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관계의 특성이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북은 국력과 경제력 및 체제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유사한 '선호도'(preference)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즉 남한의 요구가 북한 입장에서 자신이 받을 것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포용정책이 상호주의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은 엄밀히 말해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한반도의 현실과 상호 이질화로 인해 가치 선호도의 차이가 현격해짐으로써 등가고환이 어려워진 남북의 현실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군사적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등 이른바 유화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역시 대북 억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해야 하는 한반도의 현실 때문임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군사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제1원칙이 바로 튼튼한 안보 즉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핵정책의 제1원칙으로 북핵불용을 견지해야 함도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영토적 팽창은 한국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

그러나 유화가 아닌 봉쇄를 포용정책의 전제로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쟁불사의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해서 당장 북핵불용과 도발불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하고 군사적 도발에 단호히 응징해야 하지만 이 같은 봉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는 전쟁까지 불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4년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상정했을 때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개시될 경우 최초 12시간 만에 서울에는 50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고 전쟁개시 3개월 이내에 한국군 49만 명, 미군 5만 2천명의 사상자가 나며 민간피해는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를 넘어 그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임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결국 포용정책의 비판으로 제기되는 세 가지 지점이 한결같이 한국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딜레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이 탈냉전 이후 불량국가를 자신의 요구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선택한 개입정책이었지만 그 역사적 연원을 받아들인 한국의 포용정책은 미국과 다른 한반도 상황의 현실로 인해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애초에 분단국가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변화를 수용하기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상호주의를 관철하는 것 역시 북한 주민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과 이미 이질

화된 상호 가치체계의 차이로 인해 등가의 교환에 합의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기계적 상호주의가 힘들 수밖에 없고, 북핵폐기 등 단호한 봉쇄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전쟁까지 불사할 수 없기에 더디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VII. 대북포용의 폐기가 아닌 재확인을

결국 한반도적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때,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조건 포용을 비난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포용의 방식을 고민하는 일이다. 대북정책의 실패로 지적된 내용들이 포용정책 자체의 근원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반도의 엄연하고도 특수한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은 포용기조의 폐기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포용정책의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하고 진정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북포용기조의 재확인이 절실하다. 말로만 상생과 공영을 반복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도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대북포용의 기초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 내부에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두 흐름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포용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남북관계 중단을 통해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자는 강경입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보수 강경의 주문에 밀려 대북포용 자체를 포기하고 남북관계 단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촛불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핵심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대부분이 강경보수의 대북정책 성향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만 집착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주의적인 대북강경책을 지속할 경우 핵심지지층의 이반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보다 합리적인 광범위한 중간층 포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포용정책의 폐기는 북한의 굴복이나 변화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그동안 쌓아왔던 남북관계의 성과만을 무위로 돌리는 최악의 선택이다. 북을 변화시킬 아무런 효과적 수단과 지렛대를 갖지 못한 채 그저 퍼주지 않고 끌려가지 않겠다는 고집만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문만 닫는 결과일 뿐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기다림'의 정책은 사실 북이 변하기 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속수무책

의 자괴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는 퍼주기를 안하려면 실제로 '주면서' 퍼주지 않아야 하고, 끌려가지 않고 버릇을 고치려면 이 역시 '만나서' 대화하면서 고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중단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무대책의 감성적 강경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무조건 문을 닫고 남북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북한변화를 저절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대북포용기조의 재확인만이 남북관계를 명실상부한 상생과 공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자 해법이다.

VIII. 당국이 아니면 민간이, 정치군사가 아니면 경제협력으로

당국 간 정치군사적 합의가 무효화되어버린 지금의 국면은 분명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이다. 남과 북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며 대결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입장을 바꾸길 기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공하지 못할 기다림의 전략을 견어치우라고 말하는 것도 아직은 무의미해 보인다. 반포용과 방관의 대북 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일 뿐이다. 동굴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나서서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의 노력과 여지를 포기할 수 없다.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군사 분야가 어렵다면 경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조평통 성명이 발표되는 그 시각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다. 대북지원 단체인 (사)남북나눔의 대표단과 함께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 추진 중인 살림집 건설 사업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적 전면 대결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선언하는 조평통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경제건설 외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한 것도 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때문이었다. 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북으로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었다. 남북나눔이 새로 제의한 못자리용 비닐막막 제공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지만 당장 경제적 혜택이 되는 것을 북이 마다할 리 없었다. 남북 간 합의무효를 선언한 그 시각 평양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대북지원의 손을 내민다면 북의 단호함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북과 오랜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갈등하고 언쟁하더라도 양측이 최소한의 신뢰의 끈은 유지해야 하고 그 토대는 북에게 조건 없이 주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정치적 대결상황을 걸어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을 인도적으로 돕는 일마저 멈춰버리는 식이라면 당국 간 신뢰는 형성될 수 없다. 이 명백 정부가 못한다면 민간 영역에서, 정치군사가 어렵다면 경제 영역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조그마한 틈새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 표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윤덕민 교수(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긴장 조성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1월 조선중앙TV에는 군복을 입은 총참모부 대변인이 등장하여 북한군이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운운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 정치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급기야 개성공단의 통행차단 조치로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조평통 서기국은 지난 3월14일 "북남합의들을 무시하고 동족을 적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와는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범죄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외교부는 대미수교 이후에나 비핵화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6자회담이 아닌 핵보유국사이의 핵군축회담을 통해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더욱이 북한은 인공위성 실험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핵실험이후 중단된 비랑끝외교가 재가동되고 있다.

I. 정부의 탓인가?

북한의 주장대로 또는 우리사회 일각에서의 지적과 같이 북한의 강경한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인가?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남쪽의 사죄와 함께 비핵개방3000구상 폐기와 6.15,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되면 북한의 강경노선도 전환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북한의 강경노선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탓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사업이 비핵·개방3000구상이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과거 서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미국이 제공했던 '마셜플랜'을 방불하게 하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이다. 재정·경제·인프라·교육·복지의 5대 분야에 걸친 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를 3000불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엄격한 상호주의'나 '강경 대결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등 과거정부의 기존 경험사업을 모두 계승했다. 2008년 남북교역도 전년대비 1.2%가 증가(18억2천만 달러)하였고 남북왕래인원도 전년대비 24.8%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북측근로자도 74%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여 왔다.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비극적으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하던 날, 이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6.15, 10.4

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대북 식량지원 의사도 표명하고 있고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가? 놀랍게도 북한은 남한에 신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예외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중단시키고 모험적 행동에 나선다. 강력히 햇볕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취임한 해의 여름에는 대포동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미사일도 쏘고 핵동결을 해제했고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시켰다. 그간 남한에 신정부가 등장한 직후면 보인 예외 없이 일관된 행동으로 볼 때 이명박정부를 일단 길들이고 보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비타협적 강경노선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남남갈등을 부추겨 이명박정부의 국내적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II. 대미 압박 및 후계구도 발판마련

한미양국에 각각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들이 등장했다. 이는 16년 전 상황과 매우 유사한 환경이다. 16년 전 한국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했고 미국에는 클린턴정부가 출범했다. 선거전과 정권인수 과정에서 클린턴측은 직접협상과 당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했다. '피는 동맹보다 진하다'는 취임사로 시작한 김영삼 정부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를 북한에 돌려보내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했다. 그런데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남북협상을 보이콧했다. 이어 북한 군부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을 총동원했다. 얼마 뒤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북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직접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열도를 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 미북 고위급회담을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한반도의 초긴장 상황을 활용,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북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다. 후계구도의 완성과 함께 오늘의 선군체제 골격이 당시 만들어진 셈이다.

현재 북한의 벼랑끝 행동패턴은 16년 전과 놀라울 정도 유사하다. 오바마 신정부가 대북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전면대결태세를 운운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미사일 카드를 다시 들먹인다. 북한은 승부수를 걸고 있다. 벼랑끝외교를 통해 재미를 보았던 과거경험에서 초장에 기선을 제압하여 핵무장과 관계정상화를 동시에 획득하는 파키스탄식 해결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대내 정치적 측면도 16년 전과 마찬가지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인한 대내 동요를 막고 후계구도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대내결속을 꾀하고 체제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수순을 밟으며 미국과의 담판과정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후계구도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후계구도를 위한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클린턴장관은 2009년 2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수행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이 곧 후계자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대방의 민감한 후계문제를, 그것도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금기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수장은 거침없이 그 점을 언급했다. 클린턴장관이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현재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벼랑끝외교를 분석하고 있는지 단초를 제공한다. 그것은 미국이 현재의 북한 벼랑끝외교가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III.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남북관계 갈등이 후계구도와 대미 압박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적 강경행동에 기인한 상황에서 당장 남북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16년 전 북한의 강경한 정책과 관련,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전향적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이 준전시상태 선포와 함께 NPT를 탈퇴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요구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포기하고 미국의 클린턴정부에게 대북 직접협상에 응하도록 적극 중재하는 모습을 취하였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는 철저히 북한에게 외면당한다. 1993년6월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래 2000년 초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까지, 거의 7년 가까이 북한은 철저히 한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소위 '통미봉남'의 시대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갈등의 남북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북한은 역대 남한정부들을 상대했던 경험에서 어떻게 남한정부를 다루면 될지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남한정권이 바뀔 때마다 몽니를 부리며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우리 잘못도 크다. 역대 정부들은 남북대화가 끊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남북대화가 없으며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국내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남북대화는 대북정책의 수단인데 언제부터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북한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남북대화를 우선하는 남한정부들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신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남북관계가 중단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다.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남북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북한에게도 분명히 이익이다. 이익이 있다면, 북한은 반드시 대화 테이블로

오게 되어 있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북 정책 입지를 좁혀왔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외부의 냉전구조에 있다고 보고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하는 외부환경 조성에 주력하면서 북한문제의 본질에 관해 외면하여 왔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표방하여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한반도 냉전구조 탓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 일본 및 한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냉전구조의 핵심이고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면, 북한 스스로 핵문제를 풀고 개혁개방으로 나선다는 발상이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외부 탓'(냉전구조)로 보아 냉전구조 해체에 주력하였다. 북한에 대해 내부적 모순에 관해 조언하기 보다는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완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국내에 '퍼주기' 논란까지 감수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진했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방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문제를 '외부탓'으로 돌림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지 못했다. 또한 변화란 적당한 어려움에서 초래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일방적 지원은 북한정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하는 실패를 맛보았다.

사실상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냉전구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공히 세계화의 흐름에 참여한 상황에서, 북한만이 실패국가(failed state)로서 존재한다. 결국,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구조의 해체'가 아니라 북한문제의 해결이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냉전구조의 해체만 표방하고 '민족끼리, 우리끼리'라는 편협한 사고들에 갇혀 있었다. 또한 기존 틀을 깨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우방국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전략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틀을 만드는 노력도 통일논의도 실종되었다.

외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통일이후 외부위협 탓에 폐쇄적인 정책과 군사노선을 견지하였고 그 결과 경제가 낙후되고 많은 국민들이 보트 피플이 되어 국가를 등지는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외부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도이모이'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현재 활기에 찬 베트남경제가 현실화되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본다.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며 북한 스스로 내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개방에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몽니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이 아닌 '전

략적이고 원칙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지 남북대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며,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열고 통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이라는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북한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남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이후, 북핵협상은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북핵 협상이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할 경우, 그것은 결국 평화체제문제와 북한 경제재건 문제와 맞물려 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포괄적 대북지원에 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첩경은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남남갈등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의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이후 북한은 한국의 총선,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 해왔다. 한국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했으며, 한국선거에 있어서 북한의 움직임은 중대한 변수가 되어왔다. 그 결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치 세력 간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그것이 일반국민들까지 포함되는 '남남갈등'으로 비화되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남남갈등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 록

연구원 소개	43
연구원 조직	44
참여방법	46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47

연구원 소개

비전

평화와 공동체적 나눔이 충만하며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된 한반도를 열어가
는 기독교 싱크탱크

미션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대안을 연구, 교육, 전파함으로써 교회와 한국 사회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 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제시**: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교회와 사회에 전파하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② **정책 대안의 연구 개발 서비스 제공**: **한반도평화연구원**은 정부, 교회,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연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을 지원하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다.

원칙

- **선택과 집중**: 교회와 사회에 복음주의 통일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새터민 정책, 대북정책, 북한경제재건, 북한인권 등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중요하게 제기될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책임 있는 연구**: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공개적 출판이 필요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인다.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한반도 평화의 비전제시**: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와 주장은 검증된 사실에 입각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함으로써 자의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한다.
- **실천적인 정책대안 및 프로그램의 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화와 통일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새터민교육기관, 새터민정착지원기관, 대북지원단체 등 현장의 문제를 포착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연구원 조직

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사회

이사장 김지철 소망교회

이사(가나다순)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김동호 높은뜻송의교회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인중 동산교회

손달익 서문교회 오정현 사랑의교회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이동원 지구촌교회 윤영관 원장/서울대 이문식 산울교회

이장로 부원장/고려대 전우택 부원장/연세대 하용조 온누리교회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감사 김남호 이랜드 민경윤 한미약품

연구위원(가나다 순)

곽금주 서울대/심리학 김근식 경남대/북한정치 김두식 경북대/법학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북한사회

김병연 서울대/북한경제 김선욱 숭실대/철학 김영운 통일연구원/남북협력 김창수 국방연구원/군사안보

김희권 숭실대/신학 김홍규 외교안보연구원/중국정치 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남북대륙철도 남성욱 고려대/북한경제

민경식 서경엔지니어링/취업지원 박명규 서울대/사회학 박명림 연세대/한국정치 박상은 한국누가회/의학

박정란 서울대 통일연구소/북한학 박정수 성결대/신학 박중운 변호사/법학 박형동 서울대/지질 백중국 경상대/비교정치

신범식 인천대/러시아 신성호 서울대/국제정치 심상달 KDI/한국경제 심혜영 성결대/중국 안창남 강남대/세무학

양운철 세종연구소/북한정치경제 오준근 경희대/법학 원재천 한동대/인권 유 옥 변호사/사터민 및 법제

윤덕룡 KIEP/북한경제 윤영관 서울대/국제정치경제 이국운 한동대/법학 이기홍 한림대/사회학 이만열 고문/역사학

이장로 고려대/국제경영 이종철 빛과생명교회/통일신학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북한과학기술

이해완 변호사/중국 및 법제 이홍용 건국대/법학 임성빈 장신대/신학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여성학

전길자 이화여대/과학 전우택 연세대/사회정신의학 전재중 변호사/법학 정경영 가톨릭대/안보학 정우진 연세대/보건경제학

조동준 서울시립대/국제정치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경제 조영아 서울사이버대학/심리학 최도성 서울대/경영학

허문영 통일연구원/북한정치 이상 52명

섬기는 사람들

윤영관 원장 이장로 부원장 전우택 부원장 권종섭 대외협력실장 윤환철 사무국장

유승란 국장 백종근 컨선탄트(정착지원팀) 박지혜 간사 이은희 연구원

연혁

1993 남북나눔운동의 창립과 함께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조직(위원장 : 이만열)

1993-2006 월례세미나 134회, 북한방문, 분단국 방문연구

2006 제2대 위원장에 윤영관 교수 선임, 연구원 준비위원회 구성

남북나눔운동에서 독립된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결정

한국기독교교회관 607호에 사무실 개설

- 2007. 2. 12 2월 12일 창립총회 및 개원식
- 2007. 3. 29 제1회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 2007. 12. 27 사단법인 설립허가(통일부)
- 2008. 11. 7 제12회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한반도평화포럼(공개포럼) 개최 및 예정현황

회 차	주 제	장 소	날 짜
제1회	1만 새터민, 우리의 '잡'인가, '힘'인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07.3.29
제2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7.6.15
제3회	새터민 청소년 교육, 우리의 미래다	”	2007.7.14
제4회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미, 쟁점, 성공을 위한 조건들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2007.8.14
제5회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7.10.4
제6회	북한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한국기독교교회관	2007.11.12
제7회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 과제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2007.12.27
제8회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 방향 모색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8.4.18
제9회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 평화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2008.5.23
제10회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2008.8.29
제11회	남북한 경제통합전략	다사랑(가나의 집)	2008.9.19
제12회	새터민 적응사례연구 발표	함춘회관	2008.11.7
제13회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2009.3.18

참여방법

각 회원은 아래 한반도평화연구원의 회원가입요령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회원 (개인, 단체)

-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집 및 간행물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 본원의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개인, 단체, 교회)

-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후원약정을 하시면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 단체와 교회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 혹은 연구원을 강사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

-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며,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재정과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방법

한반도평화연구원(koreapeace@paran.com, 02-744-7109)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www.koreapeace.or.kr

한반도평화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특집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08년 12월 시사주간지 '한경Business'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은 2008년 11월중 12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설문 및 방문조사로 이뤄졌고, 분석은 M&C리서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분야에서 10위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KPI는 유수의 국책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앞서는 점수를 얻어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사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같은 내용을 환경 Business(www.kbizweek.com, 제680호, 2008.12.15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총괄표

분야	연구소 이름	약칭	주소
외교·안보·외국·연구·기관·의	1. 외교안보연구원	IFAN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752
	2. 세종연구소	Sejong Institut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00
	3. 통일연구원	KINU(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4. 한국국방연구원	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9
	5. 동아시아연구원	EAI(EAST ASIA INSTITUTE)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10의 68
	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의 42
	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INSS(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옛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의 23 인스토피아 빌딩
	8.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	국가안보문제연구소, RINSA(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05 국방대
	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 ARC(The Asiatic Research Center)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10. 한반도평화연구원	KPI(Korea Peace Institute)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607A호

분야별 순위 - 외교·안보

글로벌 전략 '두뇌'... 북한 연구 강화

이홍표 기자 hawling@kbizweek.com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의 1위는 외교 통상부 산하 직속 연구 기관인 외교안보 연구원이 차지했다. 2위는 민간 연구소인 세종연구소가 차지해 저력을 보였다. 3위에는 통일연구원, 4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5 위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올랐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대학의 연구소가 많았고 7위와 8위의 점수 차가 19점 차로 꽤 큰 편이었다. 100대 싱크탱크의 기준점인 10위에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올랐으며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이 불과 1점 차이로 11위에 랭크됐다. 유효한 점수를 얻은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는 총 23개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3위를 기록했다.

1위에 오른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이른바 '힙 있는 연구소'다. 1963년 외무공무원교육원(EIFSO)을 시작으로 하는 외교안보연구원은 1965년 외교연구원(RIFA)을 거쳐 1977년 현재의 외교안보연구원(IFANS)으로 개편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기능은 정책 연구와 교육 훈련으로 나뉜다.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외교 현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국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 학술 및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국내 교육 및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각 부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는 등 국제관계 전문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 국제적 기준에 맞춘 외교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외교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또 원장 직속으로 외교안보역량평가단을 구성했다. 외교안보역량평가단은 고위 외무 공무원 후보자, 참사관급, 신규 외무 공무원의 역량 평가 계획 및 진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고려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교안보역량평가단은 특히 외교 정책 현안 및 이슈 해결을 포함한 모의 상황을 개발하고, 국내외 역량 평가 및 교육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역량 평가 프

로그래밍의 수정·보완 기능도 하고 있다

쟁쟁한 국제 연구소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세종연구소의 역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연구소는 1983년 미안마 사태로 남북관계가 급랭하자 그해 11월 '평화통일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정·체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이후 1986년 1월 정식으로 개소했고 1996년 9월 '재단법인 세종재단' 부설 '세종연구소'로 재편돼 현재에 이르렀다.

민간 연구소 대표 주자 '세종연구소'

설립 취지에서 보듯 세종연구소는 안보·남북관계·지역·국제정치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았다. 이 분야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은 세종연구소가 거의 '뚝'이라는 평가다.

특히 1999년 세종연구소는 연구 기능 확대와 전문화를 위해 한반도 안보 정책을 다루는 '안보연구실', 대북 정책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남북관계연구실', 주변 4강에 대한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를 병행하는 '지역연구실',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이슈를 분석하는 '국제정치경제연구실' 등으로 체제를 정비해 긴급한 안보 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정책 대안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외 저명 인사와 연구자들을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전문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외부의 우수 전문 인력을 연구 사업에 참여시키는 객원 연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외교·안보 분야 조사 결과

순위	연구소	추천 점수
1	외교안보연구원	99
2	세종연구소	90
3	통일연구원	81
4	한국국방연구원	75
5	동아시아연구원	60
6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56
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54
8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33
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9
10	한반도평화연구원	25
11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4
12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2
1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
13	김대중평화센터	20
1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9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17	아산정책연구원	7
18	고려대 일인국제관계연구원	6
19	동북아평화연대	5
20	한국국제관계연구소	4
20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4
2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3
23	북한인권정보센터	2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이른바 '힘 있는 연구소'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외교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외교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들은 연구 사업은 물론 정책 결정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진은 외교안보연구원 포럼 모습.

내놓았다. '세종 국정과정 연구과정'은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실무 책임자들이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전략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도록 마련한 교과과정이다.

이울러 세종연구소 자료실은 관련 분야의 자료가 많기로 유명하다. 현재 사회과학 분야 4만여 권의 장서 및 770여 종의 정기간행물, CD-롬 등이 소장돼 있다.

세종연구소가 남북관계와 더불어 국제정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면 3위 통일연구원(KINU)은 남북관계에 보다 특화된 싱크탱크다. 통일연구원은 1990년 통일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당시 명칭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에는 특히 통일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별 통일 대비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 기관 간의

네트워크인 통일문제연구협의회가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남북통일 관련 연구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선전'

4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 정부 출연 싱크탱크다. 1979년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한 한국국방연구원은 1987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조직을 7개 센터로 개편하면서 국방 관련 정보 기술(IT) 분야에 특화된 IT 컨설팅 그룹을, 2006년에는 북한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매년 100여 개의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안보 환경 분석, 군사력 건설 방안, 무기 체계 정책, 인적 물적 자원 관리 정책, 국방 정보화 방안 등 관련 분

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위 동아시아연구원(EAD)은 이름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국제관계·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민간 연구소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연구 활동은 민간 싱크탱크답게 유연하고 독특하다. 연구 활동은 연구원 산하 4개 연구센터와 태스크포스 팀이 수행하며, 각 연구 조직은 해당 이슈들을 중심으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보포럼, EAI지구넷21, 한호리더스포럼, 한미 다이얼로그21 등 독특한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분야에서는 '종교와 한국정치', '동아시아소프트파워' 등의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 여론조사 분야 프로젝트, 세계화와 국가 전략·분권 헌법 등 거버넌스 연구 분야 프로젝트, 영국 보수당 역사 연구·박정희 시대 등 정치·경제사 연구 분야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6위를 차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통통한 연구소로 대학 싱크탱크 중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7위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0년 역사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를 모태로 2007년 새롭게 출범한 국책 연구소다. 특히 새 출발을 하면서 북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 수립과 테러·국제 범죄 등 신안보 분야까지로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

제13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갈등의 남북관계 - 해법은 무엇인가

낸 날 | 2009년 03월 18일

낸 곳 | 한반도평화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607A호

전 화 | 02-744-7109, 7107

팩 스 | 03030-644-7109

이 메 일 | koreapeace@paran.com

홈페이지 | www.koreapeace.or.kr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607A호

전화 02-744-7109, 7107 팩스 03030-644-7109 이메일 koreapeace@paran.com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3-836269 사단법인한반도평화연구원